www.krila.re.kr

지방자치실천포럼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9







September 2013 | vol.5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특별대담 : 한범덕 청주시장

이슈대담 :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달의 Issue

- 지방 3.0의 지향가치
- 지방 3.0의 개념과 추진 필요성
- 지방3.0과 해외 플랫폼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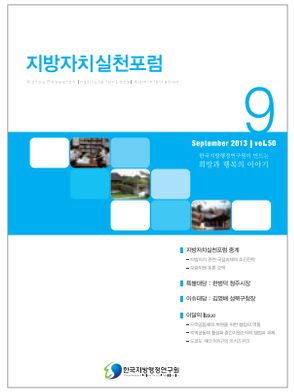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이달의 issue

지방3.0



9 September 2013 **Vol. 5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50호
발행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편집인 / 지방자치실천포럼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4 ● **특별대담 : 한범덕 청주시장**

10 ● **이슈대담 :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

16 ● **논단**
– 지방3.0의 지향가치
– 지방 3.0의 개념과 추진 필요성

● **해외우수사례** 27
– 지방3.0과 해외 플랫폼 우수사례

● **지방자치단체 탐방** 31
– 가을의 문턱에서 보고 즐기는 경상북도 힐링여행

● **연구원 동정** 3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청주시장

- **일시 및 장소** / 2013.8.23.(금) 청주시장실
- **인터뷰 대상** / 한범덕 청주시장
- **인터뷰 진행** /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범덕
(청주시장)

이승종 원장 : 취임하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들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정책은 무엇이며, 현재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범덕 시장 : 2010년 7월 삶의 질이 높고, 공간의 질이 높은 「살기 좋은 도시 청주」라는 녹색 꿈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나 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남고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시가 직면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헤쳐 가며 청주의 백년을 융성하게 할 디딤돌 하나하나를 놓는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무엇보다 66년간 분리되어온 「청주 · 청원 통합」입니다. 청주 · 청원의 최대 현안인 통합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지난 3차례 좌절을 거울삼아 양 지역의 화합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양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주도형 통합을 이루어 더욱 뜻 깊다고 하겠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통합시 4개 행정구역 획정, 4개구 명칭 선정, 통합 시청사 위치 결정, 신설 구청사 2곳 입지 결정 등 굵직한 현안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내년 7월 통합 청주시의 출범을 앞두고 행정체계 준비, SOC 등 지역 인프라 확충, 중기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효율적인 통합시 예산편성 등으로 통합 청주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시민이 혜택 받는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입니다.

우리 시는 복지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해 왔고, 올해는 당초 예산 1조 958억 원의 34.5%인 3,779억 원을 편성하여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하고 따뜻한 청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초 ·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교육 · 일자리 · 활동지원과 이동서비스 제공,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여성의 일상이 편안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일 ·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여성이 능력 있고 건강하며, 여성이 참여하는 청주를 위해 여성친화공원 조성, 여성안심택시 도입 등 5대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관 확충, 「9988 행복나누미」 프로그램 운영,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전수조사와 「실버행복돌보미」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50억 원을 출원하여 청주시 복지재단을 개관함에 따라 복지체감도 조사, 통합 청주시 권역별 서비스전달 체계 모형 개발 등 피부로 와 닿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를 매년 1만개 이상, 2014년까지 4만개 이상을 만들어 제공함으로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충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도시 「녹색수도 청주」의 기반 마련입니다.

민 · 관이 한 뜻으로 추진해 온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으로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어 활력을 되찾음으로써 시민이 즐겨 찾는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총 1,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2기 소각장 증설사업,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여 인구 100만 통합 청주시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첨단 교통정보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 활성화와 선진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이 높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승종 원장 :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이루어져 내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로 출범을 합니다. 두 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통합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범덕 시장 : 1946년 미군정에 의해 청주와 청원이 분리된 이후, 청원이 청주를 둘러싸는 기형적인 행정구조로 양 시군은 많은 불편과 제약, 비효율을 겪어 왔습니다.
전에 3차례의 통합시도가 있었으나 청원군민의 공감을 얻지 못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청주 · 청원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시급한 현안으로 민선 5기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세 차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삼아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통합 시도를 위한 착실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통합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통합추진 과정에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게 되면, 과거와 같이 관 주도의 통합으로 보여 져 반대여론이 일 것이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통합에 대한 청주시의 진정성을 비난받을 수도 있었던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양 지역의 화합 · 소통 · 상생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단절되었던 광역행정협의회를 재개하여 소통의 창구를 열었고, 공무원 인사교류를 비롯한 도 · 농 간 자매결연, 청원군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화합과 축제 속의 통합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통합은 청주청원 시민협의회와 군민협의회가 주도하도록 청주시와 청원군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주민주도형 통합이 되도록 하였고, 39개 항 75개 세부사업의 상생발전안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27일 청원군 주민투표를 통해 청주와 청원의 역사적인 통합이 결정되어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종 원장 : 향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할 경우, 청주시의 발전과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범덕 시장 : 통합결정 전부터 우리 시는 청주 · 청원 양 지역 주민화합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정서적으로 완전한 통합이 되도록 통합 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 · 청주 상생발전방안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청원군민과 청주시민의 합의 결과로, 총 75개 세부사업 중 청주시설치법 제정 등 8건을 완료되었으며, 순환도로 확충 등 49건은 추진 중에 있고, 시기적으로 통합 후에 추진할 사업이 18건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 등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건이 더 진행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생발전방안 이행을 위해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을 근거로 상생발전조례를 제정하고, 상생발전이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이승종 원장 : 청주시의 주위에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두 도시와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청주시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한범덕 시장 : 올해 2/4분기 기본통계자료를 보면, 통합청주시는 면적으로 서울 면적의

1.6배, 인구는 83만 명으로 전국의 1.6%, 재정규모는 1조 5,045억 원이며, 한국은행 충북본부 연구결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게 되면 전국 13개 대표 도시와 비교할 때 경제력이 4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국토의 중심축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주위의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시와는 경쟁하기 보다는 통합 청주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가 연계되는 발전 축을 형성하여 인구 300만 규모의 충청권 메트로폴리탄의 견인역할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특히, 통합 청주시는 도 · 농이 어우러진 인구 100만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해야 하며, 우리 지역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략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한민국 실리콘 벨리의 중심지로서 IT, BT, GT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3차 우회도로에 이어 4차 우회도로와 연계, 광역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농촌과 도시, 남동과 북서부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세계기록유산 직지와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지구 등이 유기적으로 개발하여 생태휴양과 체험 관광지의 중심지가 되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청원 생명쌀 등 지역의 각종 농산물의 브랜드화, 친환경 특화작물 육성, 직거래 확대 등으로 친환경 생명농업이 대폭 확충되어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통합추진지원단, 청원 · 청주 양 통합실무준비단에서는 통합시를 대비하여 상생발전 방안 39개 항 75개 세부사업의 착실한 이행과 통합 청주시의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승종 원장 : 이번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성공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주변의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해당지역 주민에게 통합을 위한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덕 시장 :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자체 대내외 여건에 맞는 통합 전략수립과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자치단체 간 끊임없는 대화 노력과 함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동등한 지위에서 축제 속 통합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의 통합여론 형성을 통한 통합에 대한 당위성 확보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통합을 추진한다면 주민 스스로 화합과 상생의 통합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 조석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경상북도 의회”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

오은주 수석연구원 :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은 경상북도 의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의회 의장으로서 의정활동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요?

송필각 의장 : 먼저 경상북도의회를 사랑해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30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선의원으로서 의회수장직에 오르기까지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경상북도의회는 63명의 전 동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오지마을을 현장방문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농어민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 펼친 결과, 경북도정 정책에 대폭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인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해서 복지경북인 ‘행복한 도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은주 수석연구원 : 경상북도 의회는 경북도민의 민생안전과 행복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해주십시오.

송필각 의장 :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 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정책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이는 300만 경북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지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경북도정을 견제와 질책보다는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민생관련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를 통한 조례의 제정 · 개정을 비롯한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수준높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의회내의 제도적인 연구회나 모임 등을 통한 세미나 개최 등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와같이 제9대 경북도의회 후반기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도민의 관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서민경제, 독도수호, 도청이전지원, 경북 · 대구상생발전, 지방분권추진, 윤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도민의 민의의 전당으로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자치의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은주 수석연구원 : 현재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준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송필각 의장 : 경북도청 이전은 안동 · 예천 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공정율도 41.2%로 2014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도청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성장거점 하나 더 만들고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새로운 동서발전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세종시와 더불어 한마디로 균형발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적 과업입니다.



따라서 도청이전 신도시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되어야 하며, 현재 지역주민 도움으로 작업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청사에 4,055억원이 소요되는데, 1,514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었으며, 추가로 484억원(국비총액 1,998억원)을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에게 신청사 건립비 전액과 진입도로 국비지원(50% ⇒ 70%)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으로 반드시 국비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도청이전에 차질 없이 준비하는데 의회에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 현안사항으로는 최근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외여건의 악화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첨단과학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특별대담 이슈대담 논단 해외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 탐방 연구원 동정

성공적 마무리, 2015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 개최준비, FTA에 대응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복지경북의 구현, 명품교육을 통한 경북교육 발전 등 우리 경북도의회는 경북도 및 도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은주 수석연구원 :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를 견재하고 감시, 감독하는 본연의 임무에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요. 지방의회로서 집행부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송필각 의장 :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 견제하고 주요 도정 현안과 도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욕구가 소홀히 다루어 질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로 경북발전 방안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내 주요지역마다 복지, 농업,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은주 수석연구원 : 경북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연구하는 의회로 변모하고 있다는데,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지요?

송필각 의장 : 경상북도의회에서는 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별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아 우리사회 전문분야까지 들어가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정책위원회를 출범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분야를 비롯하여 사회안전망, 임업발전, 자연생태공원 등 4개 연구단체로 활발

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서는 당면한 과제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의원이 주축이 되어 전문가와 교수, NGO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현지방문,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정 등 우리경북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은주 수석연구원 :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필각 의장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지방화의 시대입니다.

지방의 활력이 곧 국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시대에서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는데는 입법과 정책관련 정보, 분석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기구 독립 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제에 비하면 지방의원은 혼자서 도정업무 파악과 조사 · 질의 등을 해야 함으로 전문성 부족문제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의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자문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의원 스스로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의원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대담 이슈대담 논단 해외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 탐방 연구원 동정

오은주 수석연구원 :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안전행정부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분권, 행정개혁,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및 컨설팅,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송필각 의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이래 거진 30여년을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 정책개발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 재정, 지역발전 등의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실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정연수센터" 라는 특별 센터를 조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기연수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정책개발연구도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담 · 정리 오은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방3.0의 지향가치

오영균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I. 서론: 우리나라의 환경변화와 국민행복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화과정속에서 이러한 위기극복의 불확실성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문제의 갈등적 이해관계 복잡화 등 국민적 관점에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이 절실한 과제로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수준이 지속되는 저성장 구조 속에서 일자리와 국민개개인의 삶의 조건향상을 위해 3만불 수준에 도달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북핵안보위기, 기후 · 환경변화, 저출산 · 고령화, 다문화가정 등 원칙과 해법이 통하지 않는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별히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모바일, SNS 확산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정책참여, 투명성 강화, 책임성 확보요구는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민개개인의 행복정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등장한 현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로 표현되는 국정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 사회통합, 융합행정 등 다양한 국정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의 혁신, 이명박 정부에서의 실용 등 국정 키워드와는 달리 지금 제시되고 있는 국정운용의 방향성과 목적의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글로벌위기 돌파의 가장 유효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정철학은 국정을 운영하는 하나의 이론적 기반으로 각 부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설계하고 추진하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하고 있는 정부3.0과 정부3.0의 지방적 구현인 지방3.0은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하면서 주권자로서 국민(또는 주민)의 알 권리와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정부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ICT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2009년 국내에 보급된 애플의 아이폰에서 시작된 스마트 기기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분석 등을 국가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의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같은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소통을 넘어서서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운영전략 및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행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행정내부적으로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에 참여 · 개방 · 공유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부처간, 부서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광역과 기초간 할거주의에 의한 칸막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열린 정부 정책(문정욱, 2009; White House, 2009; White House, 2012)와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Data.gov.uk'(범정부 통합 정보공개 공유서비스)와 'Alpha.gov.uk' (범정부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노력 등 선진국 정부에서도 정부 내부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효율성 증진은 물론, 국민전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를 위해 이러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방3.0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내부업무의 효율화 또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만이 아니며 주민과의 대화 및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주민이 지역입지문제 등 정책과정에 함께 참여 및 대화하는 쌍방향적 소통(two-way interaction)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 복잡성, 통태성 속에서 정책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한 전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하겠다는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s)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3.0이 지향하는 소통과 공유의 네트워크 정보망은 공공 플랫폼(Public Platform)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의제설정과 정책대안의 탐색, 집행 모니터링, 성과평가와 환류의 전 정책과정의 통로(channel)와 창(window)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3.0이 설정하고 있는 방향성은 매우 타당하다고 하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내용적 측면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작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와 과제발굴노력이 요망되고 있는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Ⅱ. 지방정부3.0의 배경과 의의

지방3.0은 정부3.0의 지방적 구현이며 소위 선진국에서 추진되어온 정부2.0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방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경우 지방1.0은 일방적 정부-주민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2.0은 "자치단체가 개방 · 참여 · 협력을 핵심가치로 실현시켜 지역 전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 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방은 공공 정보와 자원을 국민에 공개 · 공유하는 것이며, 참여는 주민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은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에거스(William Eggers, 2007)는 주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와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이며 효율적인 미래정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편 가트너(Gartner Inc.)는 ICT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프로세스 및 데이터의 '사회화' 및 '상품화' 를 촉진하는 형태로 개념화하여, 소통과 연계로 인한 '사회화' , 수평적인 서비스와 프로세스 체계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공유하는 서비스와 프로세스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한편 웹2.0 개념의 창시자 O' Reilly(2012)는 전환적(transformative)이고, 다층위적이며(multi-leveled), 기술적으로 가능하고(tech-enabled), 순환적이며(iterative), 목표 지향적이고(mission-driven), 정책 기반인(policy-based), 그리고 상호균형이 이루어지는(counterbalancing) 정부의 모습을 2.0으로 표현한 바도 있다.
특별히 웹2.0을 배경으로 추진되어왔던 해외 주요국의 정부2.0은 지방정부의 2.0노력을 포괄하고 있으며 능동적인 주민 참여와 주민-지방자치단체간 쌍방향적 관계를 기반으로 계속 진화되어왔다. 호주는 주민이 공공 정보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고, 정책형성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지방정부구현을 위해 ICT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열린 정부 구현을 통한 장버 제공에, 영국은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주민 참여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데에 주력하며, 일본은 점진적인 정보개방에 초점으로 맞추어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노력은 기존 미래사회의 기술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다양해진 주민 수요에 대응하고 복잡한 사회갈등 및 정책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는 물론, 효율적인 업무방식 개선과 참여중심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2.0의 핵심 가치는 개방 · 참여 · 협업으로 이해되어지며, 논리적으로는 개방→참여→협력으로 이루어지는 3단계로 구성된다.
물론 이러한 단계는 구별을 위한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동시에 구현될 수도 있다.
지방2.0을 웹2.0 기반의 정보 · 서비스 공유와 참여 활성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진화한 정부를 의미한다면 주요국 정부와 공공컨설팅 업체, 학계 등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개방과 접근성 향상,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 주민중심의 참여 증대, 효율적 지방정부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Ⅲ. 지방정부3.0의 지향가치

지방2.0이 정보서비스 제공자, Portal 기반의 소통자, 사회적 혁신의 주도자, 수요에 반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면, 정부3.0은 역할을 재규정하여 정보서비스 플랫폼 제공자, SNS기반의 또 다른 주민, 집단지성을 일궈내는 협업의 파트너, 미리 알아서 행동하는 지능형 정부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지방3.0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주체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안전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부3.0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으로 정의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3.0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도 이에 따라 첫째,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주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를 성하며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지방정부운영 패러다임의 구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요소들은 오랫동안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들을 정부3.0을 구성하는 핵심키워드들에 대한 이슈 검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경험적 분석 없이 이론적 논의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체로 지방정부3.0을 구성하는 핵심키워드들은 협력, 소통, 지능 등 새로운 IT환경과 정치, 행정과의 접점에서 파생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환경에서 협력은 주로 참여와 행정의 생산성 향상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온 주제이다. 특히 정부실패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관점에서 협력은 정책영역에서 마련된 협력의 장(cooperation arena)에서 정부와 민간영역이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협력의 장이 지금까지는 물리적 공간이었던 반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 영역이 점차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IT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협력의 장이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소통은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의 정보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다루어온 주제들이다. 권위주의 시절 정부의 일방적 정책 홍보나 동원에 의해 선별적으로 제공되던 행정정보는 이제 쌍방향적으로 생성·축적되고 있다. 지능형 행정 또는 스마트한 행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최근 들어 급증되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된 용어들로 이미 오래된 요구이기도 하지만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클라우딩 컴퓨팅 IT생태계 구축 등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와 맞물린 측면도 있다. 지방정부3.0은 최근 박근혜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지만 아직 명확한 개념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과제의 발굴과 시행을 통해 하나 하나 명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가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에 소통을 이루고 역량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함으로써 유능해지고 무엇보다 주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통해 주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또는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Ⅳ. 결론

지방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참여·공유 및 맞춤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행정적·법제도적인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웹을 기반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는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진다고 하여도 법제도적인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게는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등에서 시작하여 공공정보 제공지침, 정보공개범위와 절차, 계약방식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반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조정하여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집행비용을 감소시키고 융합행정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상위수준의 조정메카니즘을 확립하여야 하며 관리적 차원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되고 집행될 수 있는 세부적인 재량과 성과관리에 대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관료제 내에서의 기능적 분화와 책임문제 등에 의해 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인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리더십과 조직문화, 그리고 네트워크 및 성과평가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해지도록 필요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비대칭을 중심으로 하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조직구성원이 갖고 있는 제한된 합리성을 배려하고 외재적 그리고 내재적 보상체계를 재설계하여, 의도하고 있는 정책목표중심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3.0의 의미와 실천적 가치는 충분한 지지와 동참이 필요한 타당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첫째는 공공적 문제해결을 위한 보편적 이념과 도구를 설정하고 있고, 둘째는 기존의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과 창의를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며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정부-시민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각계 각층의 애정과 참여속에서 모호한 부분이 구체화되고 다소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잘 정돈되며 무엇보다 제도적 조건들이 구비되어 주장이 명제가 되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공공문제의 해결에 유용하게 적용되어 주민의 팍팍한 삶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지방 3.0의 개념과 추진 필요성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3.0지원센터소장)

1. 지방 3.0의 개념

정부 3.0의 실천전략의 일환으로 지방 3.0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 3.0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범위에는 중앙정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정부 3.0에는 추진주체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3.0과 구분되는 지방 3.0이 논의되는 것은 지방이 가지는 차별적 특성 때문으로 간주된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다른 지역적 여건이 존재하고, 나아가 행정서비스의 공급에서 중앙정부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들이 정부 3.0의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3.0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도 정부 3.0과 구분되는 지방 3.0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의 논의에서 지방 3.0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정부 3.0의 추진주체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정부 3.0의 3대 전략과 중점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지방 3.0으로 규정하거나, 정부 3.0의 중점과제를 지방의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을 지방 3.0으로 간주하는 접근이 그러하다. 안전행정부의 지방 3.0 추진계획에서도 지방 3.0은 정부 3.0의 4대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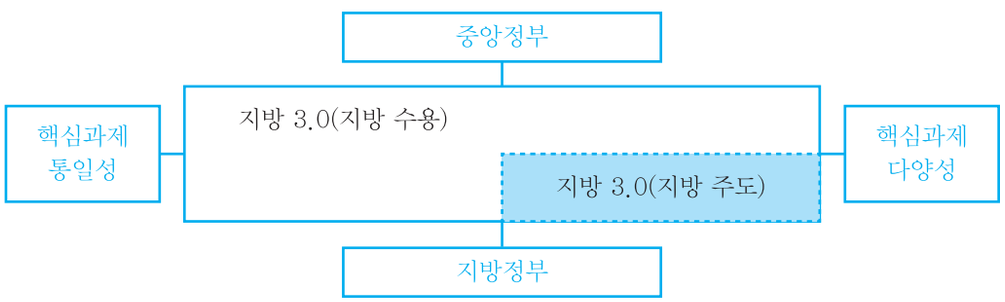
그러나 추진주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하는 정부 3.0을 지방 3.0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방 3.0의 특성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행정서비스의 최종 전달자이고, 따라서 중앙정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 3.0의 핵심과제들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히 수용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일부의 과제들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실천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실현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계획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으나,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의 실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3.0의 개념에는 추진주체와 더불어 과제특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감안하면, 지방 3.0은 지방의 특성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정부 3.0의 핵심과제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운영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의 일부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지방 3.0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림 1〉 지방 3.0의 개념



2. 지방 3.0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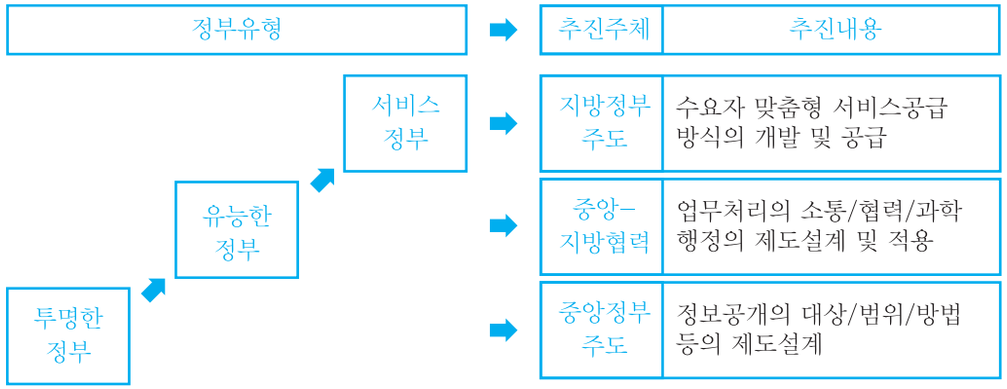
정부 3.0은 투명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 및 서비스 정부별 핵심과제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며, 민 · 관 협치를 강화하며,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며,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표 1〉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

구 분	중 점 과 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 · 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전술한 각각의 핵심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체제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투명한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로, 유능한 정부는 중앙-지방의 협력으로, 그리고 서비스 정부는 지방주도로 주요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투명한 정부구축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정보공개의 대상 · 범위 · 방법 등의 제도를 설계하고, 유능한 정부구축을 위하여 중앙-지방정부는 소통 · 협력 · 과학행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마련을 그리고 서비스 정부구축을 위하여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기초한 수요자 맞춤형 공급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림 2〉 지방 3.0의 주요내용



3. 지방 3.0의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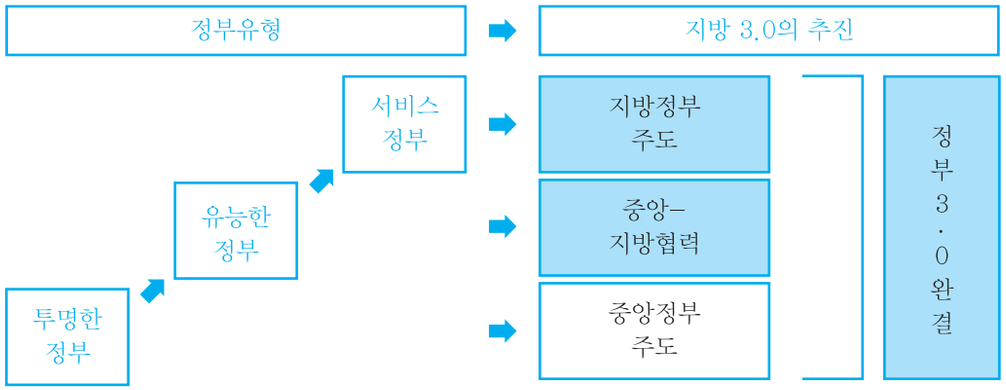
정부 3.0의 추진 필요성은 정부 3.0을 모색한 배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3.0의 추진배경은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문제의 대두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변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제약이나 정부 내의 칸막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지방 3.0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전술한 개념논의에서 언급한 핵심과제의 특성에서 그 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정부 3.0의 3대 전략과 10개 핵심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주도적인 수행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실현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계획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청되는 과제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경우, 지방 3.0의 추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3대 전략 10개 핵심과제의 실천에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수반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보되지 않은 중앙정부 주도

만으로는 유능한 정부와 서비스 정부의 달성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3.0의 완결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 3.0의 투명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 그리고 서비스 정부를 선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단계적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서비스 정부를 통해서 완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3.0의 완성은 지방 3.0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지방 3.0의 주요내용



지방3.0과 해외 플랫폼 우수사례



배정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지방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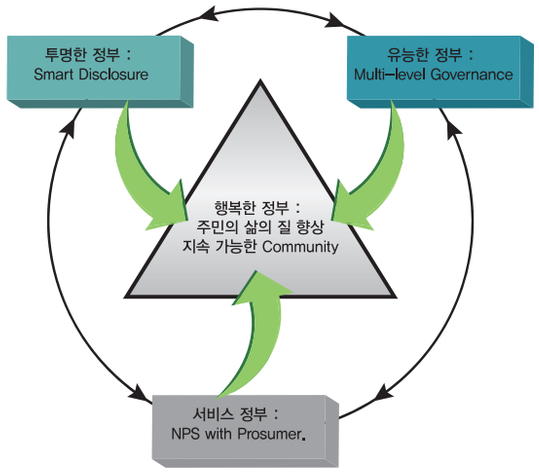
한국의 지방3.0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정부를 추구한다. 투명한 정부는 정부와 시민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스마트한 공개(Smart Disclosure) 및 정보공유 (sharing information)로부터 시작 된다 (www.opengovpartnership.org). 노르웨이는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사업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자본주의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정부의 data.gov는 300,000 dataset을 영국정부의 data.gov.uk는 9.000여개를 공개함으로써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유능한 정부는 민관협력과 정부 간 협치(Multi–level Governance)를 통해서 달성된다. 정부의사결정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민주성을 동시에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public engagement)와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멕시코는 시민단체 Fundar와 보건국(the Ministry of Health)의 협력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였고,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은 200,000 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민관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서비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방향잡기(Steering)보다는 서비스제공(Serving)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Denhardt and Denhardt 2000) 프로슈머(prosumer)–소비자가 곧 산의

주체-인 시민과 함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지방3.0의 비젼



2. 해외 플랫폼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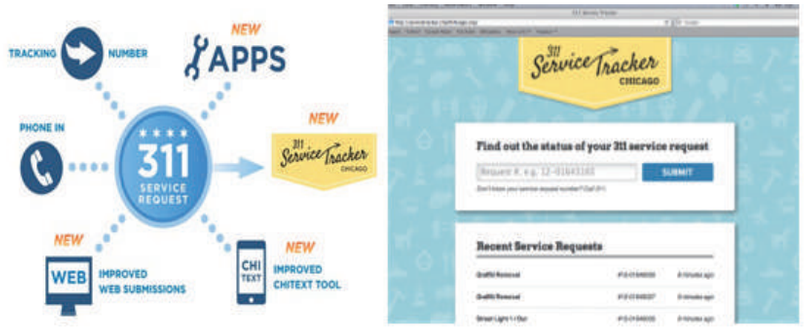
영국의 FixMystreet, 미국 시카고의 311 그리고 우샤히디(Ushahidi)같은 플랫폼(Platform)은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공공시설이나 재해재난발생 시 현장 구조 활동 등의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민관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영국의 FixMystreet (www.fixmystreet.com)는 1997년 2월 탄생한 이후 캐나다(www.fixmystreet.ca)와 한국(www.fixmystreet.kr)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영국의 FixMystreet와 한국의 이.거.바.



미국 시카고의 311은 위의 FixMyStreet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미국의 지방3.0접근방식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시카고 311은 아래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완료되면 문자서비스를 받거나 혹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문의하는 툴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미국 UPDATING 311



케냐(Kenya)의 우샤히디(Ushahidi)는 비영리단체의 웹지도 기반 오픈소스 플렛폼으로 미국의 석유유출, 허리케인 샌디, 일본 쓰나미 등으로 유명해졌는데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상황파악 및 구조 활동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과 공유한다.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공개는 너무 사이즈가 큰 데이터와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등 자칫 일반시민의 참여를 오히려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시민 누구나 정보를 올리고 이것을 웹지도로 만드는 스마트한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우샤히디(Ushahidi)는 빅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시민참여를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4〉 케냐(Kenya)의 우샤히디(Ushahidi)



특별대담 이슈대담 논단 해외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 탐방 연구원 동정

3. 외국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위에서 소개한 외국사례를 통한 우리가 논의해 볼만한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래된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담는 법 (Old Wind in a New Bottle)을 추구해야 한다. 이전 정부들에서 추구되어 왔던 지방자치의 오래된 가치들–지속가능한 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참여 민주주의–을 어떻게 정부3.0이라는 새 가죽부대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지방3.0의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 빅데이터 구축과 더불어 스마트한 정보공유를 통해 시민의 정보접근이나 활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깔때기현상, 복지사각지대, 칸막이 현상 등의 지방3.0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참고문헌〉

Denhardt, Robert B and Janer Vinzant Denhardt. (2000). The New Public Service: Serving Rather than Steering. Public Administration Reveiw 60(6): 549–559.

가을의 문턱에서 보고 즐기는 경상북도 힐링여행

*화려한 가을의 옷을 입은, 경북 청송_* ***주왕산국립공원***





사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꼽으라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첫 손가락에 꼽을 것이다. 네 가지 빛깔과 향기를 간직한 사계절, 그 어느 계절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을은 그 빼어난 빛깔과 향기를 자랑한다. 오색찬란한 단풍의 화려한 풍경과 갖가지 기암괴석들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주왕산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깊어가는 가을의 길목에서 우리를 사색하게 만든다. 또한 이곳이 과연 한국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기괴한 절경에 감탄을 금치 못한 이들은 이곳에 온 마음을 빼앗긴 채 발걸음을 돌리게 될 것이다.

경상북도 청송군과 영덕군에 걸쳐 있는 주왕산은 열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바위산이다. 주왕산이라는 이름은 신라 무열왕 16대 손인 김주원이 왕에 추대되었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이 산에 은거하며 전투를 벌였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당나라의 주도라는 사람이 스스로 후주천왕이라 칭하고 당나라로 쳐들어갔다가 패하여 이 산에서 숨어 지냈다고 해서 이름 붙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또한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대전사와 주왕암, 백련사 등 고찰과 암자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주왕산은 설악산, 월출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암산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기암괴석과 거침없는 폭포의 절경이 이어진다. 쉽게 갈 수 있는 코스는 제1폭포와 제2, 3폭포를 지나 내원마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주방계곡 코스로, 기암과 폭포가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하면서 산책하듯 다녀올 수 있다. 자하교–주왕암–망월대–학소대로 이어지는

힘내세요 대한민국
해외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 탐방
연구원 동정

코스는 자연관찰로가 조성되어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기에 좋다. 가메봉과 장군봉을 등반하는 코스와 월외계곡에서 절골계곡을 횡단하는 코스도 등산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한편의 수채화 같은 환상의 공간, '주산지'



주왕산국립공원에 자리하고 있는 주산지(注山池)는 조선 숙종때인 1720년에 쌓기 시작하여 경종 때인 1721년에 완공되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단숨에 숨이 멎어 버리고,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진 심장은 일순간 차가운 뇌를 정지시켜 버린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물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왕버드나무들과 거울처럼 물 위에 비친 주산지의 또 다른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속세의 인간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신선들만의 환상적인 공간에 와 있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된다.

특히 주산지는 물에 잠겨 자생하고 있는 왕버들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으로, 사계절에 담긴 인생의 비밀 이야기를 그린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며, 예전부터 사진작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다.

유쾌한 웃음건강센터, 경북 청도군 철가방 극장



경북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성곡댐 앞, 조용한 마을에 커다란 철가방 하나가 불쑥 솟아 있다.

쏟아질 듯한 자장면, 고춧가루 통, 식초 통, 거대한 소주병이 이곳의 트레이드마크. 2011년 5월에 문을 연 '철가방 극장' 은 미래의 개그스타를 발굴 · 육성하고 있는 곳으로 개그지망생들에게는 코미디 사관학교라 불리고, 대중에게는 익살과 재치가 넘치는 공연으로 삶에 활력을 주는 지역 명소로 성장하고 있다.

청도의 자연을 무대배경으로 차용한 국내최초 4D 전용극장은, 실내공연으로서는 특별하게 탁트인 개방감을 선물하는 곳이다. 10여 개 남짓한 코너들이 연이어 객석을 웃음바다로 물들이는 동안 '코미디는 무대에서 봐야 제 맛' 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대 위로 물줄기가 쏟아지고, 객석의자 뒤로 물이 튀는 실감나는 연쇄작용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

무대 뒷배경이 열리고 성곡댐의 푸른 하늘이 객석을 물들이는 순간, 흰 구름을 배경삼아 줄지어 날아가는 새들의 날갯짓을 본 관객들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계속 쏟아진다. 이 흥에 겨운 감탄과 저절로 치게 되는 박수는 분명히 사람들의 웃음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작게 만들어서 크게 채우자' 는 당찬 의지는 40석 규모의 객석에 반영돼 있다. 끼 넘치는 아이디어꾼들이 꾀를 모아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최첨단 개그무대를 완비하고서도, 40석 규모이니 10명의 관객만으로도 무대가 꽉 찬다고 너스레를 늘어놓는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코미디 체험을 시켜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똘똘 뭉친 철가방 극장은 바쁜 일상에 지친 이들을 웃음과 감동으로 '힐링' 해 주는 유쾌한 웃음건강센터로서 경상북도의 명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2013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일 시 / 2013. 8. 23(금) 13:00
장 소 / 경상대학교 해양과학관 307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최하는 "2013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여 1일차 제1회의 제3분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션"에서 류영아 수석연구원, 윤영근 수석연구원이 각각 발표했다.

전남대학교 학술대회

일 시 / 2013. 8. 23(금) 13:30
장 소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컨퍼런스 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전남대학교 공공행정연구소가 주관하는 "새 정부 지방행정의 나아갈 방향"에 주최기관으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에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주제발표에 배정아 수석연구원, 토론에 박해육 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3-2차 연구회 개최

일 시 / 2013. 8. 28(수) 13:3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연구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발 표 / 제1분과 (일본 측)
- 마루모토그룹의 구체적 대응에 대해(곤도 미사토 마루모토 상무이사)
- 도쿠시마현의 지역경제순환창조사업에 대해 (도쿠시마현 하바 미치노리 경영전략부장)

제2분과(한국 측)
- 한국의 '마을기업' 제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수석연구원)
- 한국 마을기업의 선진사례와 시사점(지역재단 유정규 운영이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희망비전 사전설명회 개최

일　　시 / 2013. 9. 2(월) 17: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회의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3년 9월 2일 월요일, 연구원 지하 1층 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희망 비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조기현 연구위원이 '2013년도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권오철 연구기획실장이 'KRILA 경영비전 및 추진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2013 제4차 KRILA 자치포럼 개최

일　　시 / 2013. 9. 5(목) 10:3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강　　연 / 이철휘 (서울신문사 사장)
주　　제 / 지식인은 일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발간물

● **「지방자치 Focus」 9월호 발간**

제　　목 / 지역행복생활권의 도입과 정책방향
저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선기 지역발전연구실장



● **「행정지식나눔 효자손」 제4호, 제5호 발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행정연수원 공동발간

KRIIA 교육연수 [담당자: 김유숙/ 02-3488-7353]

● **제3기 지역통계활성화 과정**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3. 9. 4 ~ 9. 6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1기 주민행복 마을만들기 과정**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3. 9. 25 ~ 9. 27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4기 지역통계활성화 과정**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3. 10. 16 ~ 10. 18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1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과정**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3. 10. 23 ~ 10. 25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2기 주민행복 마을만들기 과정**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3. 11. 6 ~ 11. 8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3기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과정**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3. 11. 13 ~ 11. 15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2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과정**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3. 11. 27 ~ 11. 29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지방자치실천포럼**」**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